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주정



'안철수 돌풍'에 정치권이 난리다. 의사·벤처 사업가 출신의 대학 교수가 현실 정치를 비판할 때까지만 해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이회창)'라며 어린아이 취급 하던 정치권이, 최근에 전 한나라당 대표 마저도 뛰어넘는 지지율로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서자 안 교수에 대한 대접이 확 달라졌다.

'병 걸리셨나(박근혜)'며 혀통대고, '반짜 거품(홍준표)'이라며 무시하면서도 '울 것이 왔다(이명박)'는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역전을 꿈꾸던 손학규·정동영·천정배 등 야권 주자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쏘시개로 쏘셔놓은 듯 벌집처럼 법도 질서도 없는 '아사리판'이 되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보인다.

안철수 돌풍에 난장판

난장판을 떠올리게 하는 '아사리판'은 본래 정반대의 뜻으로 쓰였다. 이야기는 석가모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섭과 그 삼형제가 유력인사 250명을 데리고 석가모니께 귀의했다. 승단은 이를 계기

로 세력이 급격히 팽창했다. 그러나 보니 법도가 서로 달라 갈등을 빚고, 승려로서의 품위도 문란해졌다. 결국, 세종은 계율에 밝고 지혜와 복덕을 겸비한 '아사리(acarya·사법)' 다음을 뽑아 줄가와 수계, 경전, 참선을 하나씩 맡아 이끌게 했다. 덕

‘아사리판’의 정치
(阿闍梨)

분에 형들어졌던 조직이 안정되고 서로 보살피고 공부하는 기풍이 자리 잡았다.

안철수 쓰나미에 휙휙거리고 있긴 하지만, 한나라당 또한 나름의 다양성과 치열함으로 한국정치를 이끌어왔다. 무상급식을 놓고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평소에도 박근혜 전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정우언 의원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 이제오 의원, 김문수 지사 같은 좌파출신도 예외는 아니다. 자를 때마다 새로운 머리가 돌아나는 그 리스신화의 독백 '히드라'를 닮았다. 지난

몇 년간 한국정치사는 한나라당의 내부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책대결이든 권력투쟁이든 한나라당 판이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아사리'들은 그 수가 많지도 다양하지도 않다. 중도의 손학규 대표는 그저 점잖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어느 날 갑자기 좌파가 됐다. 정세균·천정배·박주선 최고위원 등은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쓸만한 아사리'는 오히려 재야에 있다. 안 교수, 박원순 변호사, 문재인 노무현재단이 사장에 언론의 조명이 집중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요즘 민주당은 어떤가. 무상급식 주민 투표 승리 여세를 몰아 보편적 복지 공세를 계속한다면 결국 주도권을 총선·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었는데, 서울시장 후보 쟁탈전에 너도나도 나서면서 '인물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야권통합에 있어서도 통 큰 양보나 치열한 민심 탐색은 찾아보기 힘들다. 진정성마저 의심스럽다.

대신 '골목대장'이라는 작은 권력에 취해 있다는 인상이 짙다. 특히 호남출신 국회의원 상당수는 야권 연대를 위한 양

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호남은 자신들 개인적인 행동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불같이 해야 民心도 움직여

민주당에 암방을 제공 중인 광주·전남 사람들로선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광주 일보가 추석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다. 내년 총선에서 '새 인물을 찍겠다'라는 지역민들이 45.9%, '현역의원을 찍겠다'라는 사람들(34.4%)보다 훨씬 많았다. 낙후 탈피를 민주당에만 기대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권통합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백과사전의 활제 '브리태니커'가 누구나 편집에 참여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밀리고 있음을 눈여겨보자. 야권에서도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아사리'들이 정보와 권한, 책임을 나누고 소통하면 '민심의 바다'가 풀어주지 않겠는가.

고려말 조선 초에 아사리가 무법의 대명사로 와곡된 것은 불교는 억누르고 유교를 장려하는 정권논리가 크게 작용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타락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다. 아사리들이 잠시나마 부패하면서 지도력을 잃은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아사리판'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론매체부장) jjnews@kwangju.co.kr

시설

정치권, 추석 민심 제대로 새겨라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들이 고향에 내려와 확인한 '추석 민심'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주류를 이뤘다. 일자리는 없고 하루가 무섭게 오르는 물가와 날로 늘어가는 빚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은 기쁨 보다 앞선 것이다.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1~2년 새 지역경제의 범람목이었던 건설업이 조토화되다시피 했고, 조선업 역시 내리막길이다. 그에 벼금가는 대기업이 새로 입주한 예도 없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상당수는 부도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지난하다. 우선 일자리가 없다. 20~30대 취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전남도의 고용률은 50~60%로 타·시·도와 비교해 최하위권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 채소·과일류 등 천정부지의 물가와

‘반값’ 근처도 못 간 등록금 대책 실망스럽다

정부·여당이 지난 8일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득이 낮을 수록 장학금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대학 등록금 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일수록 끌어내는 것으로, 소득 하위 70% 가정 약 100만 명의 대학생 등록금이 평균 22% 준다. 기초수급자는 등록금 총액의 약 75%가 줄지만,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140만 원 이하인 7분위는 약 11% 정도 준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후 5년 만에 나온 이 같은 방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전체적으로 '반값'은커녕 평균 5% 정도로 인하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폭발적 전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의식해 마지못해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정은 국민이 좀더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생색내기나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불만만 쌓일 뿐이다. 등록금 인하에 대학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낮출 여지는 많다. 적립금만 수천억 원씩 쌓아놓고 방만한 경영으로 등록금이 새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학들도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려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 鼓

바야흐로 아트페어(Art Fair)의 시대다. 매년 3월 열리는 마스트리히트 아트페어, 6월 바젤 아트페어, 12월 마이애미비치 아트페어 그리고 가장 늦게 생겨나 매년 10월 런던에서 열리는 프리즈 아트페어 등 이른바 세계 4대 아트페어 외에도 해마다 전세계에서 수백 개씩의 아트페어가 개최되고 또 새로 생겨난다.

이렇게 아트페어가 범람하면서 미술계에는 '아트페어 피곤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매의 세계를 파헤친 서적 '은밀한 갤러리'에 따르면 경매회사인 '필립 스트리퍼'의 뮌헨 파트너 미하엘라 노이마이스터는 '이젠 새로 운 아트페어가 창설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고통이 밀려온다. 미술계가 무슨 짐지 서커스단처럼 바다수준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한탄했다.

아트페어는 화랑과 미술품 딜러들이 며칠간에 걸쳐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산업박람회다. 아트페어가 '최고의 작품을 최악의 방법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최근 막을 내린 광주아트페어 역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아트페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멋진 축제였다. 광주아트페어의 진화와 견고를 기대한다.

/총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온펜칼럼



옥영식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 비친 농촌

명으로 줄어 전체인구의 7% 수준이다. 특히 농가인구는 306만 명으로 전체 인구비중의 6.4%에 불과하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이주와 업종 전환이 주요인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지만 고령화의 속도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UN에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14% 일때 고령화사회, 20% 미만은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화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농림어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1.1%로 전체인구(11.3%) 보다 2.8배나 더 높아 대한민국의 고령화사회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가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장년 총 인구유입은 없고 기존인구만 늙어간다는 의미다. 농림어가 경영주 평균연령이 2005년 60.6세에서 2010년 62.0세로 1.4세나 증

가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를 연령 기준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히 균등하게 2등분한 것을 중위연령이라 한다. 그런데 농림어가 인구의 중위연령은 55.5세로 전체인구(38.1세)보다 17.4세나 높아 나타났다.

회갑이 가까운 나이에 제 농사 짓기에도 힘들어 읍면사무소에 나가 마을 일보고 이런저런 회의에다 각종 민원으로 뛰어다니기엔 버거운 연령이다.

도농교류 및 정보화부문을 보면 전국 3만 6498개의 행정기구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2613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그나마 주요용도는 마을안내(51.7%)

정도에 그치고 있어 소득과 연결하여 짜임새 있게 일하는 연령층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농촌의 주소득원인 농축산물 판매금액은 1000만 원 미만 농가가 67.8%로 대부분이며, 3000만 원 이하 농가는 전체의 87%에 이르는 현실은 암담하다. 5000만 원 이상 농축산물 판매농가가 4.5%에서 6.7%로 상승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양극화는 노동력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와 농업생산에 차질을 빚고 국가경제에 갈수록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 이른 추석이 지났다.

과일 값이 비싸다고 호들갑이더니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에는 사과·배·도매가격이 지난해 추석보다 오히려 15~20%가 낮았다고 한다. 자식들을 다시 도회지로 보내고 들판에 나서는 농민들에게는 이래저래 우울해지는 기운이다. <2005년 7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도산

요즘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면 참으로 아 이러니하다. 조·중등 학생들에게 주는 무상급식의 불가(不可)를 놓고 서둘러 시민들의 의사와 묻는 주민투표를 했다가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창피만을 당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비록 33.3%에 미달해서 개회는 못했지만 민주당의 비겁한 투표거부, 방해로 인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민투표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의 승리다"라고 구차스런 변명까지 하였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비록 33.3%에 미달해서 개회는 못했지만 민주당의 비겁한 투표거부, 방해로 인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민투표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의 승리다"라고 구차스런 변명까지 하였다.

국가가 누란(累禍)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전라도의 의료인 정신은 더욱 빛을 발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장을 손에 들고 서라도 전쟁터로 나아갔다. 고령명, 김덕령

으로 대표되는 의사들은 국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려는 충절로 전국 산야를 피로 물들었다. 특히 1908년 전라도의 의병들은 왜군과의 전진수사와 같은 이들은 이순신 장군의 곁에서 승병들의 동원과 해전 당시의 천기(天氣)를 자문했다. 이때의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보면 여수 흥국사에 약 800여 명의 승군이 주둔하였고 나아가 싸우는 군사들의 대부분이 전라도 지역의 농부나 어부들 출신이었으며 그들이 먹어야 할 군량 미 역시 모두 호남의 들판에서 거두어들인 양식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결국, 일제(日帝)는 호남의 병을 없애기 위한 최후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09년 9월 '남한폭도로벌작전'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쓴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 "일본들이 길을 나누어 민가를 수색했다. 그들은 그를 치듯 사방을 포위했으며 촌락마다 살살이 수색하고 가가호호를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즉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의병들은 다시 비밀결사운동을 주도하기도 하고 만주나 중국 등지로 탈출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중심이 되기도 하였으며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정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이찌 이 충무공이 "호남이 아니면 국가도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호남은 전 국토의 산발산을 거의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식량을 공급해 왔으며 특히 민주화를 선도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의 우월함을 간직해온 고장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장을 손에 들고 서라도 전쟁터로 나아갔다. 고령명, 김덕령

게 된다. 또 출판사끼리의 가격 담합 문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교육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 | | | |
|---|------------------------------------|-------------------|----------|
| 회장 金鐘宅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논설주간 申港榮 | 편집국장 曹庚完 |
|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 광고문의 062-227-9600 | |
| 대표전화 | | | |